

2021년도 국가직 9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메가공무원 황철곤 행정학)

1. 출제 난이도와 경향

2021 국가직 9급 행정학은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2020 국가직 9급보다는 평이했으며 2020 지방직 9급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학의 점수는 90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험행정학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루지는 포인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기출 포인트를 토대로 약간씩 나아간 논점들도 2~3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논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득점을 위해서는 예측되는 논점도 적절히 학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출제 유형분석

수험행정학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비교, 논리, 키워드’입니다. 라이벌 개념들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각 개념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충분한가, 개념과 관련된 키워드를 숙지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세 가지 출제포인트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더불어 수험행정학의 여섯 파트도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출제포인트별		출제파트별			
비교	9문제	총론	4문제	인사	3문제
논리	7문제	정책	3문제	재무	3문제
키워드	4문제	조직	5문제	지방	2문제

3.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 6번 : 근무성적평정의 오류와 해결에 대한 단순지식보다는 논리적 이해를 체크
- 12번 : 예산과정이 각각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 체크
- 14번 : 정부부처형 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지 체크
- 17번 :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의 9급 최초 출제 (파이널모고 4회 19번 논점)
- 20번 : 공공봉사동기이론의 9급 최초 출제 (시즌1 동형모고 9회 13번 논점)

4. 2021 지방직 9급 대비 학습법

- ① 주요 개념은 ‘비교’, ‘논리’, ‘키워드’의 3박자를 맞춰서 정리해야 합니다.
- ②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논점은 120%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③ 예상되는 미기출 논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논점에 약간 엮는 정도로 가져가신다면 차별화된 점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철곤 드림 :)

문 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효과 발생
- ② 시장의 독점 상태
- ③ X-비효율성 발생
-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 **출제포인트** : 비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③ X 외부효과, 시장의 독점, 공공재의 존재 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다. 하지만 X-비효율성은 정부 관리활동 상의 비효율성으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답 ③

문 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출제포인트** : 논리 (조직목표의 다양한 역할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O 조직목표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유발 기제가 될 수 있다.
- ② 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설계하게 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③ O 조직목표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주는 미래지향적 기능을 담당한다.
- ④ X 조직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 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① 태스크 포스
- ② 프로젝트 팀
- ③ 네트워크 조직
- ④ 매트릭스 조직

· **출제포인트** : 논리 (네트워크 조직의 기본적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③ O 네트워크 조직은 결정·기획·조정·통제와 같은 핵심기능을 남겨 놓고, 집행이나 생산과 같은 부차적인 기능들은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협력하면서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이다.

정답 ③

문 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ㄴ. 국회의 국정조사
-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ㄹ.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① ㄱ, ㄷ, ㄹ, ㅅ
- ② ㄴ, ㄷ, ㄹ, ㅁ
- ③ ㄴ, ㄹ, ㄱ, ㅇ
- ④ ㄴ, ㄹ, ㅂ, ㅇ

· **출제포인트** : 비교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ㄱ X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내부의 부처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 ㄴ O 국회는 행정부 외부의 입법부이므로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 ㄷ X 기획재정부는 행정부 내부의 부처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 ㄹ O 국민은 행정부 외부의 주체이므로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 ㄹ X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 ㅂ O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비정부조직은 행정부 외부의 주체이므로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 ㅅ X 중앙행정기관장의 평가는 행정부 내부 인물의 평가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 ㅇ O 언론은 행정부 외부의 주체이므로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정답 ④

문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출제포인트 : 키워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O 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 중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O 자치단체는 상수도나 하수도의 운영과 같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X 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가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O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동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③

문 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를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출제포인트 : 논리 (근무성적평정의 오류와 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가)

· 난이도 : 상

· 해설 및 정답

- ① O 일관적 오류는 체계적 오류의 다른 표현으로, 특정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후한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제로 상중하의 비율을 정해 놓고 평가를 하게 하는 강제배분법을 사용한다면 불규칙한 평정을 완화할 수 있다.
- ② O 근접효과란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근무기간 동안 중요 사건을 누적해서 평가하는 중요사건기록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X 관대화 경향은 평정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간관계와 같은 비공식집단적 유대를 고려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평정결과 공개에 따라 평정자에게 쏟아질 수도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평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관대화 경향의 바람직한 완화방법이 아니며, 강제배분법과 같이 강제로 상중하의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다.
- ④ O 연쇄효과는 한 평정요소에 대한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류인데, 이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피평가자의 성실성을 판단한 후 똑같은 피평가자의 전문성을 연이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별 평정이 아니라, 성실성에 대해 A와 B를 비교하는 방식과 같이 평정요소별로 평정을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답 ③

문 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 출제포인트 : 비교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O 과학적관리론에서는 조직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했다.
- ② X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학적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간관계론이다.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욕구에 관심을 가졌다.
- ③ O 과학적관리론은 최선의 관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므로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에 주목했다.
- ④ O 과학적관리론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식인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동작연구, 시간연구, 직무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정답 ②

문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가 상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 **출제포인트** : 비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O 정부의 역할로 방향잡기를 제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이다.
- ② X 공동체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이다.
- ③ X 신뢰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이다.
- ④ X 시장은 뉴거버넌스가 아닌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기구이다.

정답 ①

문 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 **출제포인트** : 비교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사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ㄱ O 규제정책은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특정 집단을 규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 ㄴ X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므로, 분배정책이 아닌 재분배정책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 ㄷ O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므로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ㄹ X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일반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에 해당되므로 분배정책에 해당된다.
- ㅁ O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구 운영규칙 등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정부조직의 설립과 신설, 선거구의 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정답 ②

문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최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 **출제포인트** : 논리 (준예산 제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가)

· **난이도** : 중

· **해설 및 정답**

- ① O 국회가 정부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O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X 준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모든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 등의 유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한해 준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O 국회가 정부의 결산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간은 정기회 개최 전까지이다.

정답 ③

문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 ② 품위 유지의 의무
- ③ 복종의 의무
- ④ 성실 의무

· **출제포인트** : 비교 (각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를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O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 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①

문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출제포인트** : 논리 (예산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난이도** : 중

· **해설 및 정답**

- ① O 예산요구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일부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전년도인 2021년에 작성해서 편성해야 한다.
- ② O 예산배정은 예산의 집행 행위이므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은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
- ③ O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2021년도에 진행된다.
- ④ X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예산을 집행한 후 다음 년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은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

정답 ④

문 13.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제포인트** : 키워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④ X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정답 ④

문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 **출제포인트** : 비교 (정부부처형 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중

· **해설 및 정답**

- ① O 공기업은 공공수요를 민간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 정부가 관여하여 설립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공기업의 설립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O 시장에서의 독점성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설립하는 공기업의 설립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O 공기업의 설립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므로 자본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기업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기업은 정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과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문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 **출제포인트** : 논리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X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과 준거인물을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가 아닌,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 ② O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들의 욕구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매슬로우를 비판하면서 욕구라는 것은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O 브룸의 기대이론에서의 기대감이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표시된다.
- ④ O 앨더퍼의 ERG이론은 욕구 계층의 상향만 주장하는 매슬로우를 비판하면서,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문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 **출제포인트** : 비교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X 연구자의 측정기준이 변화하는 것은 측정수단요인으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이 아닌 내적타당성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 ② O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은 없는 경우이므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 ③ O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에 해당된다.
- ④ O 크리밍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에 해당된다.

정답 ①

문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 **출제포인트** : 비교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가)

· **난이도** : 중

· **해설 및 정답**

- ① O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소환하여 직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② O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가능하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O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 ④ X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정답 ④

문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 **출제포인트** : 논리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①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직접 형성하는 주체로 시민을 전제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② X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단순한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로 보지 않으며, 시민들 간의 대화와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을 공익으로 본다.
- ③ O 신공공서비스론은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책임성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 ④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한 생산성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정답 ②

문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출제포인트** : 논리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 **난이도** : 하

· **해설 및 정답**

- ㄱ O 할인율은 미래가치를 할인하는 비율이므로, 할인율이 높은 경우라면 미래가치가 적게 할인되는 단기사업이 장기사업보다 유리하다.
- ㄴ X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인 비용편익분석은 유형적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 ㄷ X 순현재가치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 현재가치를 빼는 것이 아니라, 편익의 총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순수익과 관련된 지표가 되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ㄹ O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수익률로 공공사업에 대한 할인율을 구하지 못할 때 쓰일 수 있는 기법이다.

정답 ②

문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페리와 와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 **출제포인트** : 키워드 (공공봉사동기이론의 세 가지 차원을 알고 있는가)

· **난이도** : 상

· **해설 및 정답**

- ① O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동기부여 요소들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 ② O 공공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 요소는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합리적 이익의 추구, 자비심과 애국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 ③ O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과는 다르므로, 공적 영역에서의 독특한 봉사동기가 있는 사람을 공직에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 ④ X 페리와 와이스가 제시한 공공봉사동기이론은 합리적 차원(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 규범적 차원(공익과 형평성 추구), 정서적 차원(자비에 대한 애국심과 애정 추구)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끝//